



제309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제 1 차 복 지 환 경 위 원 회

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

[손정자 의원 대표발의]

검 토 보 고 서

2025. 2. 5.

복지환경위원회

전 문 위 원 서 용 관

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5 1월 24일 손경자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1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 부모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,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에 대해 규정함 (안 제1조부터 제2조)
- 나. 적용대상에 대해 규정함 (안 제3조)
- 다.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함 (안 제4조)
- 라. 시장의 책무와 학교, 가정 및 시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(안 제5조)
- 마.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규정함 (안 제6조)
- 바. 부모교육 내용에 대해 규정함 (안 제7조)
- 사.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에 대해 규정함 (안 제8조)
- 아. 재정지원, 교류협력 등에 대해 규정함 (안 제9조부터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1
- 나. 예산조치 : 불임2
- 다. 관련부서 : 여성아동과
- 라. 입법예고 : 2025. 1. 24. ~ 2025. 1. 31.(7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,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교육 등을 포함한 내용의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
- 아울러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의 지식, 소양, 태도는 자녀의 인성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이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구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
- 따라서 부모가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는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입법체계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

☑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,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조성,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여성가족부장관,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시행계획의 수립·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(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·상담하고,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, 다양한 가족생활교육·부모교육·가족상담·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2조(건강가정교육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결혼준비교육
2. 부모교육
3. 가족윤리교육
4.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☑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

제4조(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)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·교구 등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

- 조례안 제7조(부모교육의 내용)
- 조례안 제11조(부모교육 사업의 위탁운영)
- 조례안 제12조(재정지원)

2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『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』 제3조제2항제1호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작성) ① 『지방자치법』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8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와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자료를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23.7.27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3.7.27.>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기 추진사업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되지 않고 또한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생략

4. 작성자 : 복지국 여성아동과장 배진위